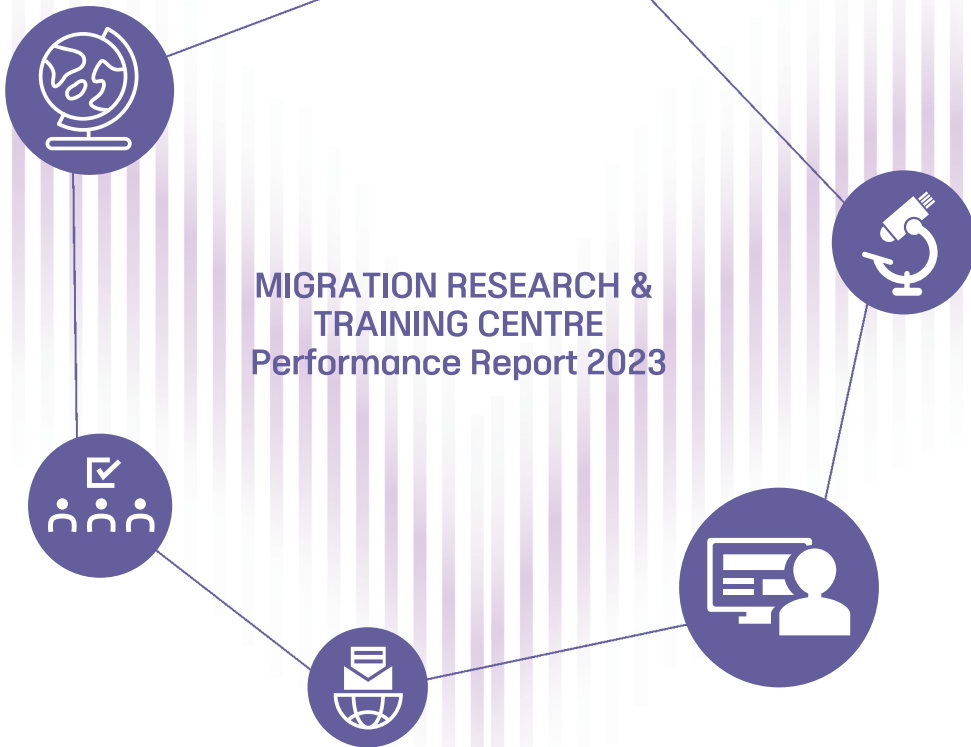


# 이민정책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 CONTENTS

발간사 07

## PART 1. 연구원 소개

- 01. 설립목적 및 기능 10
- 02. 주요연혁 11
- 03. 비전, 미션, 조직도 12
- 04. 2023년 한 눈에 보기 14

## PART 2. 2023년 사업 성과

- 01. 연구원 4대 뉴스 18
- 02. 연구사업 성과 20
- 03. 교육사업 성과 33
- 04. 협력사업 성과 36

## PART 3. 2024년 사업 계획

- 01. 연구사업 계획 44
- 02. 교육사업 계획 45
- 03. 협력사업 계획 46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와 한국 정부 간 체결된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협력 기관이며, 2023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둔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과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기능인력(E-9)과 숙련기능인력(E-7-4)의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우수인재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국내 거주하며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민자들의 취업과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민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높아진 이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원은 국민과 이민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이민정책이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민데이터센터를 정식 직제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3년 대한민국 국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과 역할을 법령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협력사업을 통해 이민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와 몽골의 출입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역량을 전수하며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정책연구원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 정부 및 다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정부와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우 병 렬

**이민정책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Performance Report 2023



# PART 1. 연구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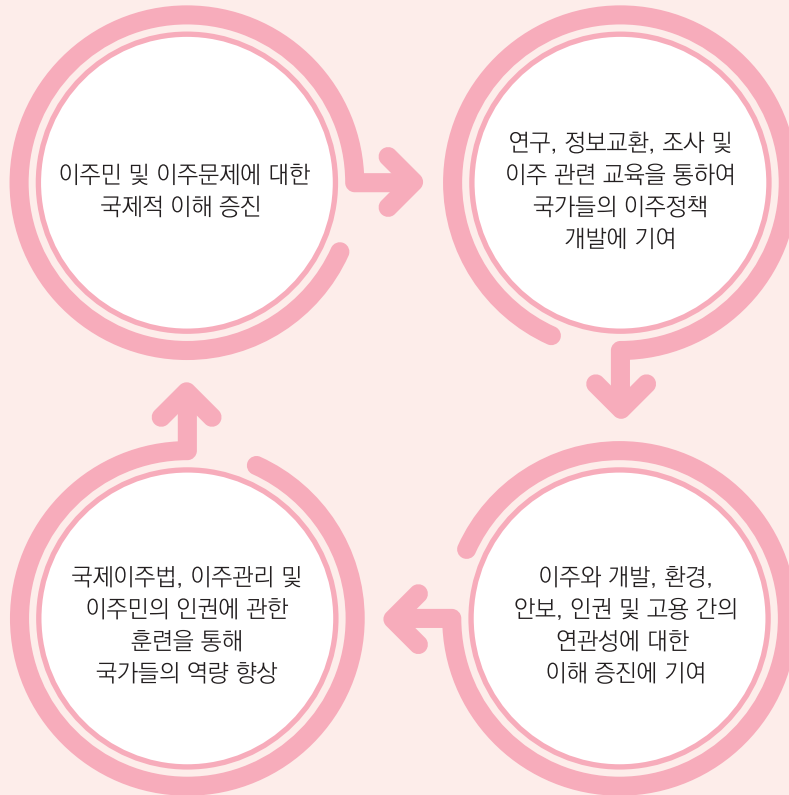


01. 설립목적 및 기능	10
02. 주요 연혁	11
03. 비전·미션, 조직도	12
04. 2023년 한 눈에 보기	14

## 설립목적 및 기능



### 설립목적



### 주요 기능

- 0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정보교환
- 0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 0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 0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 0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정기간행물·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보급

## 주요 연혁 History



## 비전·미션 Vision & Mission

### 비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

### 미션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수행

### 목표



#### 연구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개발과 추진 지원



#### 교육·홍보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 증진



####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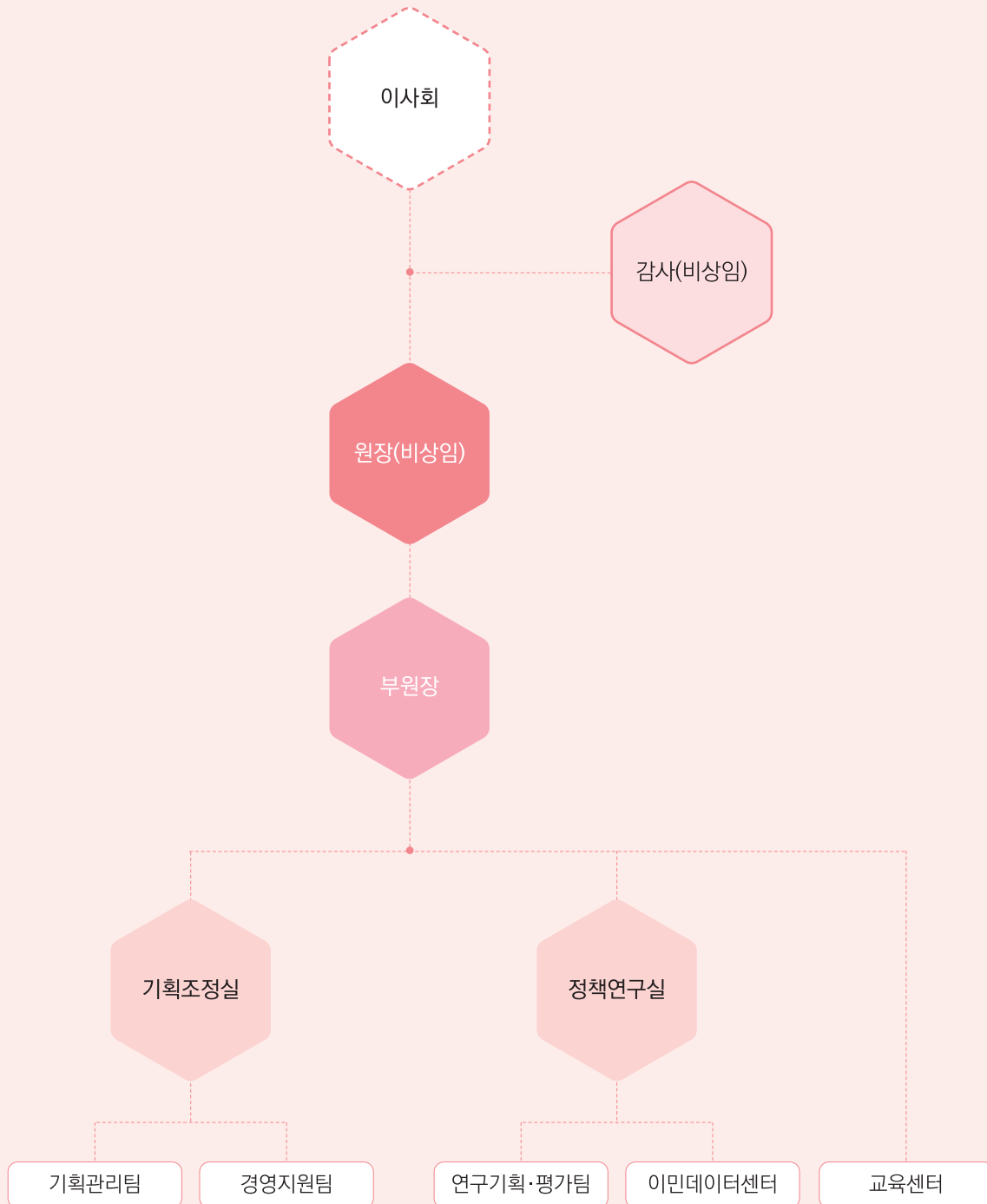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조직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기능 강화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 2023년 한 눈에 보기

**1. JAN.**  
1.2 이민정책연구원 청렴실천결의대회  
1.6 제4대 강동관 원장 퇴임식

**2. FEB.**  
2.15 이민정책연구원 폭력예방 세미나  
2.2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공동개최

**3. MAR.**  
3.13 통계분석센터(TF) 설치·운영 개시



2월. 다문화이주민정책포럼

**11. SEP.**  
11.1 제5대 우병렬 원장 취임  
11.17 제3회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11.20 신임원장, 법무부장관 면담  
11.22 OECD 수석정책분석관 (Jonathan Chaloff) 초청 세미나  
11.24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11.24 한국이민학회, 일본이민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11.27~28 <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실시

**9. SEP.**  
9.11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실시



11월. 신임원장 취임



11월. 지역 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식



11월.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포스터

**12. DEC.**  
12.15 몽골 이민청장 방문  
12.18~19 UNHCR한국대표부, 국내 5곳 대학 <난민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4. APR.

4.27  
 <KOICA  
 라오스 출입국행정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4.28  
 UNHCR,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난민포럼> 공동개최

5. MAY.

5.12  
 이민정책연구원-서울시 교육청  
 양해각서(MOU) 체결

5.26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5.31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개최



5월.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개최

8. AUG.

8.22  
 일본-대만  
 사회통합 연구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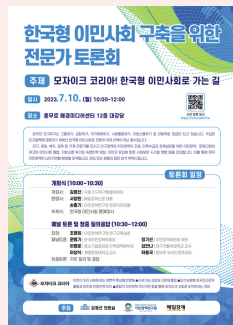
7. JUL.

7.10  
 김영선 의원실, 매일경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동 개최

7.14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실  
 <이민정책 간담회> 개최

7.17  
 주한페루대사관 신입대사  
 협력 회의

7.1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개정 시행



7월. 토론회 포스터

6. JUN.

6.13  
 이민정책연구원-몽골  
 이민청 양해각서(MOU) 체결

6.12-25  
 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실시

6.22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6.30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 세미나 개최



6월. 몽골이민청 MOU 체결

이민정책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Performance Report 2023



## PART 2.

# 2023년 사업 성과



01. 연구원 4대 뉴스	18
02. 연구사업 성과	20
03. 교육사업 성과	33
04. 협력사업 성과	36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법학회는 세계인의 날\* 16주년을 기념하여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헌정사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이민법제의 형성 과정 및 개선방안”, “이민법의 쟁점과 도전과제”, “독일의 전문인력 이주 법제 및 우리 이민정책에의 시사점”, “헌법상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본 단순 인력 관련 법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법무부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함

## 2023년 학부모 소통 워크숍(다함께 TALK! TALK!) 운영

이민정책연구원은 서울다문화교육센터(다+온 센터)와 공동으로 “2023년 학부모 소통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총 3차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주배경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국내 아동 학부모 및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상호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진행 후 국내 학부모는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며 서로 간 벽을 허물 수 있었다”고 했고, 이주배경 자녀의 학부모는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아이들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연구사업

연구원은 국내외 이민정책 관련 조사, 자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 각종 출간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3

연구(정책)보고서/연구총서

4

워킹페이퍼/통계시리즈

16

이슈/통계브리프

4

수탁연구보고서

## 02. 연구사업 성과

### | 연구보고서 |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국적 및 사회통합정책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



- I. 서론
- II. 정부 조직개편의 이론적 검토
- III. 출입국·이민분야 환경분석
- IV. 국내·외 사례분석
- V. 출입국·이민정책 기능분석 및 재설계

연구 책임자 김화연 | 공동연구자 권항원, 김윤권, 조영희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 재설계 연구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민자 체류 관리 및 사회통합 등 관련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학계,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민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정책 수립의 체계성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맞추어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이론적·실무적으로 설득력 있는 조직 설계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출입국·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2차 전문가조사를 통한 부처별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안)집행관리기구’, ‘(B안)총괄조정기구’, ‘(C안)범정부통합기구’를 조직재설계(안)으로 제시하였다.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현황분석: 이민과 공공 사회복지
- IV. 실증분석: 패널 회귀분석
- V. 결론 및 제언

연구 책임자 김도원 | 공동연구자 민수진, 변재욱

#### 이민과 공공재정: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분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출예산 측면에서 실증분석한다. 이민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선발 이민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 혜택 적용은 제한적이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증가가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를 초래한다는 일관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국인주민의 영향은 체류유형, 지역특성,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향후 외국인주민 증가와 이들 집단의 고령화, 사회복지 적용 대상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측면의 대응과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 서론
- II. 문헌 검토
- III. 난민 수용 경험 조사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연구 책임자 장주영 | 공동연구자 김희주, 이내연, 허정원

### 난민 교류와 난민 수용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일반인이 난민을 지역사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게 되는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난민과 지속적 교류가 있는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난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기반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유발 요인과는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난민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아보았다.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 방안을 인식 개선, 정착 지원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I. 서론
- II. 정책의제설정과정과 빅데이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II. 출입국·이민분야 언론보도 분석
- IV. 출입국·이민분야 연구 및 정책분석
- V. 결론

연구 책임자 김화연 | 공동연구자 유정호, 유정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출입국·이민 분야 정책의제 관리 연구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만 이민 현상의 복잡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할수록 집단별 수요 및 요구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수많은 사회문제 중 어떤 문제를 우선적·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때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이민분야에서 정책의제 발굴 및 분석·관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언론보도, 연구결과물, 정책을 분석하여 기존 출입국·이민분야의 정책형성과정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루어져야 할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의제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I. 서론
- II. 재정착 난민 현황
- III. 한국의 재정착 난민 제도 설계와 운영
- IV.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 분석
- V. 재정착난민 제도 해외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VI. 결론

연구 책임자 조영희 | 공동연구자 박서연, 김정현, 최영일

###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수용, 정착,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시하려는 것임. 첫째, 재정착난민제도 각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 둘째, 재정착난민제도 각 '단계별 연계 방안' 셋째, 재정착난민제도의 궁극적 목표로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재정착난민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재정착난민 뿐만 아니라, 협약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난민 정책개발에도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 II. 외국인(해외) 채용 관련 국제논의
- III. 이민의향표명 모델 사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 IV. 국내 적용 가능한 이민의향표명 모델
- V. 결론

연구 책임자 최서리 | 공동연구자 이창원, 이상지, 신소희

###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이민제도 개선방안(II): 이민의향표명 모델 적용방안

이 연구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의향표명 모델의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급변이 예상되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허가 범위나 규모 등은 확대되고 있지만,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외국인)의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취업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의 경로를 밟을수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의향표명 시스템은 이민희망자 풀을 구축하여 이 풀에서 이민자를 심사하는 두 단계 이민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이다. 이 연구에서는 3개국에서 이민의향표명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최근의 EU 인재풀(Talent Pool) 논의를 참고로 하여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이민의향표명 모델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서론
- II.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정책 및 현황
- III. 주요국 정책 사례
- IV. 서울시 정책 추진 과제

연구 책임자 박민정 | 공동연구자 김명희, 박도찬, 박에스터, 우효진 이민호, 이화용, 이희영

###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정책에 발맞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법무부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 아동 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을 검토하였는데, 주변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중국, 타이완의 사례를, 인재양성 및 지역연계 참고 사례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향후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I. 서론
- II.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현황과 배경
- III.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실태와 원인
- IV. 해외사례: 일본과 영국의 체류기간 초과 현황 및 관리
- V. 결론

연구 책임자 이창원 | 공동연구자 최서리, 김도원, 박성일, 강성식, 최효원, 신예진

###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원인 연구

국내 체류기간 초과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여 년간 단속, 특별자진출국제도, 합법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더욱 많은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류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이나 자진출국, 합법화 등은 체류기간 초과 사후 조치인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원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진출국자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행위자 관점에서 출국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한다, 이어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류기간 초과를 야기하는 국내 법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의 체류기간 초과자 발생 원인과 대처 방식을 살펴본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 연구총서 |

이주와 관련된 법제도, 동향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개괄하여 소개하는 연구



- I.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 II. 이민통계DB 구축 사업
- III. 사업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 책임자 김도원 | 공동연구자 이창원, 최서리, 박성일

### 증거기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통계DB 구축( I )

본 연구총서는 증거·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민정책 연구 분야의 각종 행정 및 조사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민정책연구원 이민통계DB 구축 사업의 계획수립-사업추진-향후 계획 등 일련의 사항을 기록한다. 이민통계DB에는 이민분야 공공 데이터와 연구원의 자체 조사연구 수행을 통하여 생산된 다양한 자료가 탑재된다. 또한, 본 사업에는 연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각화 솔루션 개발이 포함된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정보 보안 등 구축 초기 단계의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원내 연구진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민 서비스 개발, 정부부처,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의 통계, 데이터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확대와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 정책보고서 |

이민정책 현안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제언이 목적인 연구



- I. 서론
- II. 독일의 외국인 노동력·전문인력 도입법제 및 정책연혁
- III. 독일의 「전문인력이주법」
- IV. 결론-시사점

연구 책임자 최윤철 | 공동연구자 이보연

### 독일 외국인력 관련 법제의 역사적 변천과 한국 입법과정에 관한 시사점 연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력 공급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과 숙련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력을 자국 노동시장에 공급해온 대표적 국가로서, 비교대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숙련노동인력 도입을 위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의 개념 정의, 외국인노동자의 전문자격·숙련 정도에 따른 차별적 정책 수립, 외국인력 도입 대상을 저숙련노동자에서 전문노동인력으로 전환, 국내 유학생 활용방안 확대, 외국학위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정주화를 대비한 법제와 정책, 사회통합과 공존을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I. 서론
- II. 프랑스 헌법 간점에서 본 이민정책 발전과정
- III. 프랑스의 이민 법제 발전과정과 입법 쟁점 분석
- IV. 한국의 이민법제 개선 방향

연구 책임자 강명원

**프랑스 이민법제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통합정책의 관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민족과 문화 인식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관점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이민 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관점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기존의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개선하고자 최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리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통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법전 구축사례는 우리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I. 서론
- II.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재 도입 동향
- III.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의 재검토와 향후 방향성
- IV. 특정 분야·업종의 중층적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향후 방향성
- V. 일본의 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

연구 책임자 이해진, 마츠시타 나미코, 야마구치 루이

**일본의 이민정책 전환:  
이민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프레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유학생 취업 촉진, 개호 분야의 기능실습생 도입과 체류자격 '개호'의 신설,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생 재고용 등을 통해 외국인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장기 취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특정기능제도의 신설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시장의 다양화, 세부화를 제도화하면서 일본인만으로 부족한 필수노동자의 도입, 정착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보여지는 일본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외국인 정책이 일본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 I. 서론
- II. 미국의 Selective Service 정책의 개괄 및 발전과정
- III. 한국의 병역 상황과 미국의 Selective Service 비교 분석
- IV. 결론

연구 책임자 이내연

**미국의 Selective Service로 본 이주민의 병역 의무 및 관리 정책 연구**

이 연구는 정주형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병역 자원을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병역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방 법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과 이주민을 통틀어 모든 만 18~25세 남성이 Selective Service에 병역 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Selective Service는 만 18~25세 남성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일자리 정책(정부 지원 직업훈련, 정부 취업 및 사업 계약), 운전면허 제도,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귀화 정책과 연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인 미국의 Selective Service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워킹페이퍼 |

이주 관련 다양한 주제를 학술적으로 다루며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 연구 책임자 임정택

####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베트남 가정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생태학적 접근의 질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11명의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와 7명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베 가정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 유형을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으로 구분하고,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베트남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적·맥락적 요인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는 비록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과 더 거리가 가까운 분리형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한-베 가정 자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 현지의 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인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이러한 경험의 폭은 언어습관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맥락적 요인과 상호 작용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문화변용적 접근이 북-남 국제이주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전례 없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I. 서론
- II. 부모초청 관련 태도
- III. 부모초청 제도 해외 사례
- IV. 한국의 부모초청 제도
- V. 결론

### 연구 책임자 장주영, 허정원

#### 이주민의 부모 초청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부모 세대 초청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 현황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주민의 정주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주민의 부모초청을 유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정주형 이주민의 확대를 고려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주민 중 다수의 출신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의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잠재적 요구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인의 성인-부모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 및 이주민 부모 초청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이주민 부모초청 제도를 변경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행 한국의 부모 초청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I. 도입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 연구 책임자 장주영, 허정원

####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이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응답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 과제 '사회주의 배경 이주민 밀집 지역의 한국사회 통합방안 연구(2022)'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주민 관련 변수, 지역 관련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이주민 관련 변수에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위협의 구체적 인식과 추상적 인식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 추상적 인식의 설명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통계시리즈 |**

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조사 자료가 향후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의 소개 및 기초분석 결과를 제공



- I. 개요
- II. 조사결과
- III. 통계표
- IV. 부록: 설문지

연구 책임자 이창원 | 공동연구자 박성일, 최서리, 김도원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자 실태조사**

이 조사는 국내 최초의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자진출국신고자와 강제퇴거대상자 대상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60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이 종사하는 산업과 임금, 국내 취업활동과 근로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동안 공식통계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해도 출국하지 않은 이유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 및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 이슈브리프 |**

국내외 이민 관련 이슈, 쟁점을 다루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



연구 책임자 김화연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이민정책과 관련된 행정자원을 관리·배분하는 수호조직으로, 이외 관련 부처를 필요 자원을 전담 조직에 요청·요구하여 자신들의 미션을 수행하는 주창조직으로 역할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출입국·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간 협력 및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연구 책임자 조영희

**이주거사노동에 관한 이민정책 쟁점과 한국에의 적용방향: 싱가포르 경험의 '타산지석'**

본 이슈브리프는 우리나라가 이주거사노동 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자 한다면, 이민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쟁점-이주거사노동자 수요 및 공급 가능 규모 파악, 공급방식 결정,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 책임자 장주영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 간병, 육아 등 돌봄이 포함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의 도입에서 “돌봄”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사전에 검토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목하였다. 이 브리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돌봄 영역을 연구하는 전문가 12인의 의견을 담고 있다.



연구 책임자 박주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논의: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생산가능인구·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지방 소멸과 같은 시급한 사회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한국은 2020년대에 이르러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전문인력으로 보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학생 정책 또한 이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은 1)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의 구체적 목표 설정 필요, 2)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및 취업 종합 안내서 제공, 3) 지역대학-기업-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 4) 다양한 인턴십 기획의 마련, 5) 외국인 유학생/졸업생에 특화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플랫폼 마련 등과 같다.



연구 책임자 최서리

**OECD 인재유인지표와 한국에의 시사점**

각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재 유치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ECD는 국제 비교를 위한 인재유인지표 (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를 개발하여 각국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개선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첫 번째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OECD는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OECD 인재유인지표 개발의 배경이 되는 논의들과 지표의 구성 요소, 실제 산출된 지수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책임자 최서리

###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민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소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예측되면서 최근 외국인 고용정책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고용(취업)허가를 논의할 때 늘 제기되는 반론이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이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사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가 현재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국민 일자리 보호와 기업 인력난 해소의 상반된 지향점 사이에서 국내 이민정책 방향 설정이나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 통계브리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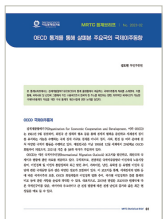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이민 통계 현황 및 연구원이 직접 생산한 통계 자료 소개



연구 책임자 최서리

### 2010~2022년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 추이와 특징

2002년 영주(F-5) 자격이 신설되었을 당시 영주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은 대만 화교였는데, 20년이 지난 시점 대만 출신자는 전체 영주자격자의 6% 남짓으로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중국국적 동포(한국계 중국인)가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주자격자 규모나 구성비 변화를 통해 한국의 영주이민제도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해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경로별 영주자격자 비중을 살펴보면 동포 이민경로를 통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족이민경로를 통해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비중도 26~38% 사이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이민경로를 통해 국내 정착하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연구 책임자 김도원

###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국의 국제이주동향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통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제이주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선진국 그룹에서 이민 수용국으로서 한국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한편, 다각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제이주통계의 작성을 위한 국내 통계의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연구 책임자 최서리, 김도원, 박성일, 이창원

### 특정활동(E-7) 자격자의 규모 추이 및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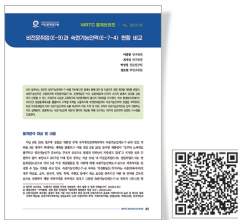
취업 관련 체류자격의 대부분이 산업이나 직종이 특정된 데 비해 특정활동(E-7)은 8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취업 관련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때 취업이민이 확대된다면 특정활동의 규모가 가장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00~2022년 특정활동 자격 소지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2023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정활동 자격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의 운영 등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데이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 김화연

### GPT-4를 활용한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오피니언마잉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GPT-4를 활용해 언론의 쟁점과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173건)와 YouTube 댓글(4,169건)이다. 댓글 분석 결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찬성(18.1%) 의견 보다 우려(50.5%)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반대 의견 중 가사근로자 인권침해(31.2%)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27.7%)이라는 지적이 주요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통계브리프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GPT-4와 같은 LLM(Large Language Models)을 활용하여 대중의 의견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책설계에 참고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연구 책임자 이창원, 최서리, 박성일, 김도원

### 비전문취업(E-9)과 숙련기능인력(E-7-4) 현황 비교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데 사실상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23년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국적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와 숙련기능인력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비전문취업자 대비 숙련기능인력의 수를 비교하여 어떤 지역 및 어떤 국적이 숙련기능인력으로 많이 전환하는 지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책임자 조하영

**국내 이주민의 지역분포 변화와 정책적 함의: 등록외국인을 중심으로**

장기체류하는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도 외국인의 정체와 의미를 해석하고 변화추이를 이해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등록외국인의 규모는 내국인 주민의 인구학적 변화와 지역 산업의 변화, 중앙정부의 체류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 비율의 종단적 탐색은 각 지역의 시기적 맥락이 외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브리프는 지역별 등록외국인 비율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외국인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거나 감소한 지역 혹은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들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 책임자 박성일

**서울시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속감과 행복감 비교**

동일한 지역에서 살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으로 인해 다른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본 브리프는 「202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을 토대로 내·외국인 간의 소속감과 행복감을 비교하고, 인구사회적 및 체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내국인은 자신의 지역(동네)에 대한 소속감에서 외국인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흥미롭게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내·외국인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소속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 특성별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일본인, 재외동포(F4)가 소속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행복감은 일본인, 전문인력(E1~E7)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연구 책임자 이창원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규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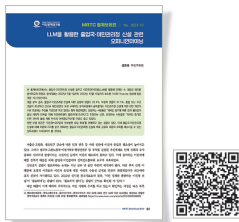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엄정한 체류관리를 표방하면서 체류기간 초과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체류자격에서 체류기간 초과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02~2022년 기간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규모 동향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고 초과체류율을 분석한다. 아울러 2016~2022년 기간 체류기간 초과 신규 발생 동향, 그리고 2005~2022년 기간 동안 체류기간 초과자들의 초과체류 기간을 살펴본다. 끝으로 체류기간 초과자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과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요청되는 통계를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 김영근

### 외국인 어선원(E-10) 현황 분석: 고용허가제와 비교

현재 선원취업자(E-10)의 총 정원은 해상노련과 수협(또는 해운조합) 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 해양수산부 적정성 검토 후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지침에는 국내 체류 중인 선원취업(E-10) 자격자의 전체 규모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선원(E-10-2)의 경우 기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로 입국한 자도 총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어업분야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선원취업자(E-10) 총정원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된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향후 관련 정책 및 통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연구 책임자 김화연

### LLM을 활용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관련 오피니언마이닝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앞두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온라인 속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와 Youtube 영상에 달린 댓글 10,729건이다.

댓글 분석 결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긍정적 댓글이 23.1%, 부정적 댓글이 31.1%, 중립 또는 무관 댓글이 45.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19.9%)"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증가로 인한 관리와 불법 체류 단속의 어려움(27%)"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한편 부정 의견은 '이민청=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경향이 컸다. 이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목표 공유와 대중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설득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사업

이민정책에 관한 국내외 이해증진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공무원

2

체류외국인

3

민간활동가

4

후속세대

3

일반시민

31

수탁교육 - 서울시

262

수탁교육 - 법무부

1

MOU 체결

### 03. 교육사업 성과

#### | 기본교육사업 실적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는 내외국인 대상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교육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면, 2023년은 교육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체험형 교육이나 토론수업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간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 표1. 기본교육사업 ]

No	구분	사업명	일자
1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민간활동가 대상 이민·다문화정책교육(1차)	5.8.
2		시흥시 공무원·민간활동가 대상 이민·다문화정책교육(2차)	9.20.
3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1차, 성동문화재단)	5.23.
4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2차, 성동문화재단)	5.23.
5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3차, 영등포구청)	6.1.
6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4차, 영등포구청)	6.2.
7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5차, 강동구청)	6.8.
8		서울시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6차, 광진구 공무원)	7.24.
9		법무부-지자체 이민정책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7.7.
10	체류 외국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설명회 및 통합시민교육(1차)	10.27.
11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설명회 및 통합시민교육(2차)	11.2.
12	민간활동가	경상북도 시군 중간관리자 리더십 향상교육	6.22.
1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교육	7.18.
14		지역 이민정책 협력교육(지역 이민정책과 센터의 역할)	8.30.~31.
15	후속세대	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1차)	11.27.~28.
16		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2차)	
17		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3차)	
18		2023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4차)	
19	일반시민	학부모 소통 워크숍: 다함께 톡톡 워크숍 I	10.28.
20		학부모 소통 워크숍: 소그룹 어울림 투어	11.15.
21		학부모 소통 워크숍: 다함께 톡톡 워크숍 II	12.9.
22	교육협력	이민정책연구원-서울시교육청 MOU 체결	5.24.

**| 수탁교육사업 실적 |**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제1지원단으로, 입국 초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의 법·제도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대상을 유학생,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 외국인 뿐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계절근로자로 확대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양성을 통해 총 18개 언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교재 및 표준강의안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서울시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대상별 교육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의 이주배경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와 국내 학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을 활용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 표2. 수탁교육사업 ]

발주처	사 업 명	사업기간
법무부	202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제1지원단)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총 262회, 8,548명 이수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2023. 1.1.~12.31.
서울시	2023 일반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총 31회, 939명 참여	2023. 5.31.~12.15.



[ 서울시 공무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 법무부 - 지자체 이민정책 협력추진 정책 세미나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계절근로자) ]



[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연구원 '학생 보호자 소통 워크숍' ]

## 협력사업

이민정책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국내

3

정부기관협력

2

네트워크활동

1

수탁협력

» 국제

2

국제기구협력

8

네트워크활동

2

기타협력

## 04. 협력사업 성과

### | 협력사업 실적 |

연구원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이민정책 수립과 국민의 정책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정 지원 활동을 하였고, 이민 분야 유관기관 및 학회 등과 공동 학술회의,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구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이민정책 연구기반 확충과 중앙정부-지방-학계-연구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과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다양한 국제 협력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2023 난민포럼' 공동 개최,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과 '한국-일본-대만 이주민 사회통합 연구자 간담회' 개최, 한국이민학회 국제학술대회 활동 등 해외기관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몽골 이민청과 MOU 체결 및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 국내협력 실적 |

No	구분	사업명	일자
1	기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포럼	2.21.
2		(법무부) 제3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6.~12.
3		(김영선 의원실, 매일경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 방안 토론회	7.10.
4	네트워크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식	11.24.
5		(UNHCR한국대표부, 국내 5곳 대학) 난민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12.18.~19.
6	수탁	정부기관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5.12.~31.

| 국제협력 실적 |

No	구분	사업명	일자
1	국제기구	(UNHCR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 2023 난민포럼	4.28.
2		(UNAOC, IOM) 2023 국제 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 심사회	9.20.~24.
3	기본 네트워크/ 기타	(페루 이민청) ODA사업 발굴 협력회의	4.~6.
4		(파라과이 이민청) 고위급 화상회의	5.26.
5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5.31.
6		(몽골 이민청) MOU 체결	6.13.
7		(주한페루대사관) 신임대사 협력회의	7.17.
8		(메지로대학교, 니혼대학교) 일본-대만 사회통합 연구자 간담회	8.22.
9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Record Migration to OECD Countries: The 2023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11.22.
10		(한국이민학회, 일본이민정책학회) 2023 한국이민학회 국제학술대회	11.24.
11	수탁 기타	(KOICA) 라오스 출입국행정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19.11.~'23.7.31.
12		(KOICA) 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 관리 역량강화 (계속)	'23~'25

| 국내·국제협력 사진 |

KOICA 라오스 출입국행정 역량강화  
출입국기관장 간담회  
('23.4.27.)



2023년 난민포럼  
(\*23.4.28.)



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 1차년도  
(\*23.6.12.~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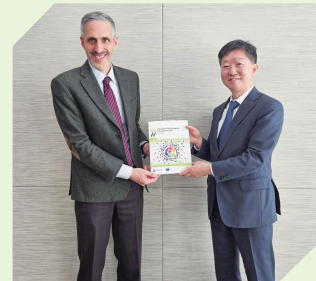
연구원 - 조정훈 국회의원  
이민정책 간담회  
(\*23.7.14)



제3회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시상식  
('23.11.17.)



OECD 수석정책분석관  
(Jonathan Chaloff) 초청 세미나  
('23.11.22.)



2023 한국이민학회 국제학술대회  
('23.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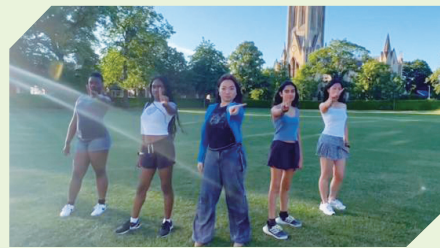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식  
(’23.11.24.)



(UNAOC&IOM)  
2023 국제 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 심사상영회 개최 및  
우수작 3편 선정



**Bob le petit éléphant**  
(14 children)



**Say bye to the stereotypes!!!**  
(Angela Ning, Qiu Ka Lai Angelina)



**Derrière les mots**  
(Manon Sabrier-Gesrel, Louise Masson)

이민정책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Performance Report 2023



# PART 3.

## 2024년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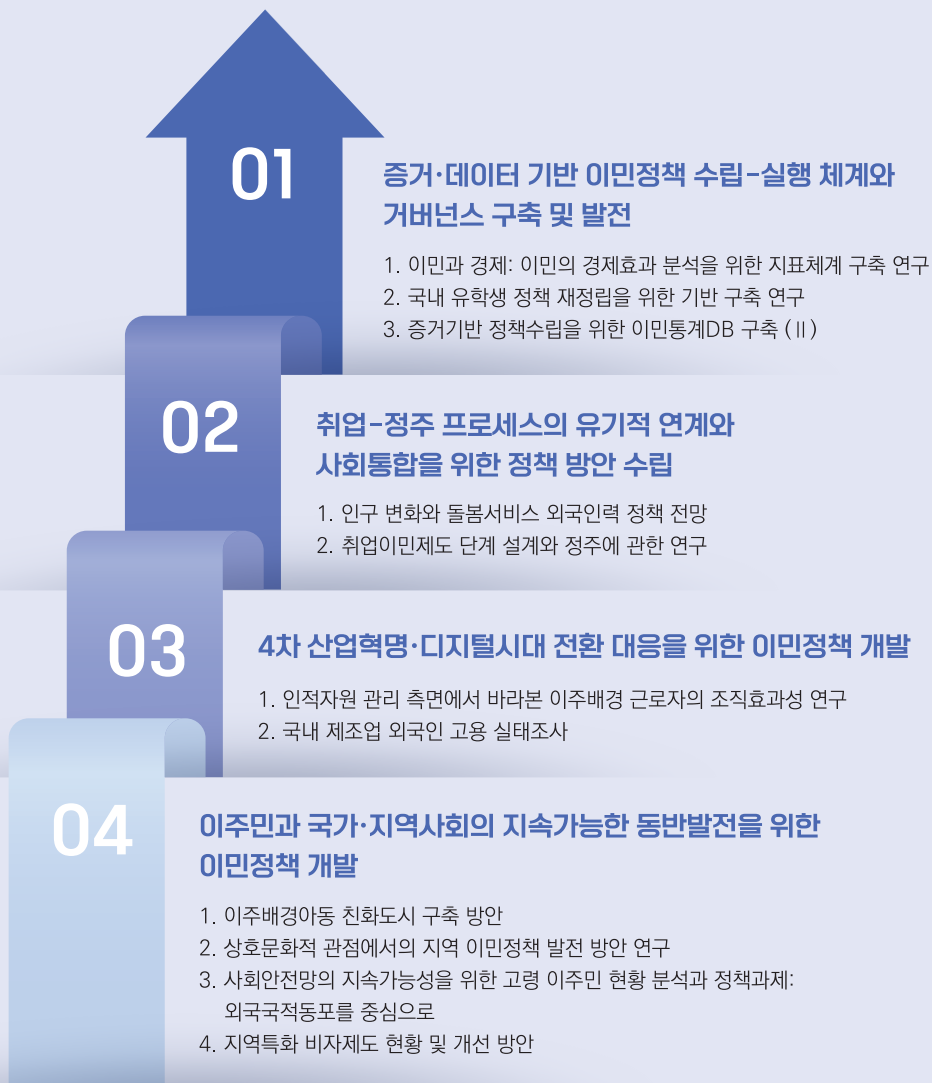


01. 연구사업 계획	44
02. 교육사업 계획	45
03. 협력사업 계획	46

## 01. 연구사업 계획

2024년 연구원은 기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며, 기술 및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이주민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이주민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와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는 연구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원은 수시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 관련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당면 사회 이슈와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6대 연구영역: 이민법·행정, 이민경제, 국제이민협력, 사회통합, 인권·난민, 이민동향분석

## 02. 교육사업 계획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는 국내 유일 이민정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하는 이민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내국인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이민자 정착주기에 맞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2024년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교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대상 확대, 우수인재 대상 패스트트랙 설명회 등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01

### 기본교육 운영

- 전문성 강화 교육(공무원, 민간활동가, 대학(원)생 등)
- 국민 인식 개선 교육
- 체류외국인 교육

02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전문적 정보 전달 및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03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교육센터 자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04

###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수탁)

- 2024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워크숍
- 2024년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존) 유학생,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 계절근로  
(신규) 재정착난민, 외국인 근로자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03. 협력사업 계획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은 필요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 기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이주기구(IOM), 국제노동기구(ILO),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논의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01

### 국제기구 등 글로벌 협력

- (OECD) Taskforce on Migration Forecasting
- (IDB) Migration Unit's Projects
- (IOM, ILO) 공동 이슈브리프 발간
- (UNAOC) 국제 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
- 해외 유관기관(대학, 연구원 등) 학술교류

02

###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활동
- 국내 유관기관(학회, 연구원, 대학 등) 학술교류
-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운영

03

### 신진연구자 발굴

- 제4회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개최

04

### 수탁협력

- (KOICA)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강화(2차년도 초청연수)

## 소통채널

연구원 홈페이지	www.mrtc.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www.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채널찾기	@mrtc

## 이민정책동향 Weekly Report

이민정책연구원은 매주 이민관련 국내외 뉴스와 정책자료,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연구원 소식 등을 간추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mrtc.re.kr](mailto:contact@mrtc.re.kr)로 정기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상/하반기)

연구원에서 매주 발송하는 '이민정책동향 Weekly Report' 내용을 취합·편집하여 상/하반기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세미나 소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민정책연구원 2023년 사업보고서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인	우병렬
발행처	이민정책연구원
주 소	08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문 의	T 02-3788-8000   F 02-3788-8098   H www.mrtc.re.kr
디자인	서림기획

-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는 이민정책연구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